



코로나19는 이윤 체제의 성격을 보여 준다

관련 기사 4, 5면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 방한 강연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6~9면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여권

3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
그대로

9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 드러낸
코로나19

5면

[인터뷰]
2년 넘게 직접고용 투쟁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12면

[노동운동 전략 논쟁]

- 사회연대기금
- 금속노조
“연대임금” 중단이
보여 주는 것

10, 11면

온라인 기사

- 철도노조 투쟁
- 한국GM
물류센터 폐쇄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정선영

2월 6일 대통령 문재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부산형 일자리가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황성, 군산에 이어 일곱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이자 “최고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부산형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부산형 일자리는 ‘코렌스’라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BMW와 전기차 부품 납품 계약을 하면서 부산에 공장을 짓기로 해 추진됐다.

부산시는 코렌스에 부지를 싼값에 제공하고, 막대한 세금 혜택 등을 주며 투자를 유치했다.

정부는 이번엔 일자리 4300개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홍보했다. 그런데도 만들어지는 일자리 중 2022년까지 코렌스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는 605명뿐이다. 나머지 3700개 일자리는 2031년까지, 그것도 대부분 코렌스의 하청 공장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코렌스가 부품을 만드는 하청 기업임을 고려하면, 하청의 하청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산형 일자리가 “원·하청 상생 일자리”라고 강조한다. 그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해 하청 임금을 원청의 80퍼센트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코렌스 노동자들의 연봉은 현대자동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코렌스의 하청 기업 노동자들은 이것의 8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결국 부산형 일자리도 다른 지역형 일자리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해 보인다.

여기에 5년간 노사분규 자제, 맞춤형 근로시간제 도입과 전환배치 수용 등으로 노동 유연성 높이기도 협약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요컨대, 부산형 일자리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노동 유연성을 강요하는 계획이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해 적잖은 진보·좌파 단체들은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기업 투자 유치” 계획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해 왔다. 부산형 일자리는 그 최신 사례다.

그런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노동자연대

일자리 참사에 책임 있는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 확대하며 생색내고 있다

부산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민정 테이블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의 저질 일자리 확대 정책에 협력하는 것은 정부의 위선적인 생색내기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만 낼 것이다.

지난해 제조업 고용은 9만 명가량 줄어들었다. 조선업 고용은 5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조선업과 한국GM 등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구조조정을 벌일 때 이를 수수방관하며 기업 편을 들어 왔다.

민약 정부가 기업 지원에 쓴 막대한 돈을 부도 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썼다면, 또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늘렸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임금과 조건 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주52시간제조차 무력화하는 공격에 나섰다.

이랬던 정부가 부산형 일자리와 같은 저임금 일자리 정책을 두고 생색내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정부는 저임금 지역 일자리를 앞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도 못박아 더욱 강화하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올해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노동조건 공격과 정부의 친기

업·반노동 정책이 더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투쟁을 강화해야만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개정정보]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주류들 제치고 샌더스가 떠오를까?
- ★ 영국 트랜스 여성 활동가가 말하는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 ★ 트랜스젠더 영화 추천 〈소년은 울지 않는다〉
- ★ 최고치 경신한 홍콩 빈곤 인구 캐리 램 정부는 기업 살리기에만 급급
- ★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 ★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총당 시도
- ★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 위해 철도 인력 대폭 총원하라
- ★ 감염병 예방 위해 국정통제 강화? 별 효과 없으면서 이주민 편견만 조장
- ★ 한국GM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폐쇄 결정, 계속되는 노동자 고통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단체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하는 문재인 정부

김문성

2월 14일 한국궐립 총선 여론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당이 각별히 공들인 ‘중도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절반이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야당 심판론(39퍼센트)을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더 많다.

다른 조사들에서도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우파가 재통합한 미래통합당(가칭)과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여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던 때와 다른 것이다.

여당은 최근에 사람들의 반감을 살만한 짓을 계속 해 왔다. 조국 임명 국면에서 드러난 위선과 부패의 옹호,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 보려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의 추한 꿈수, 민주당 비판 칼럼을 썼다고 해서 임미리 교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둔감함과 오만 등.(심지어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 때문에 임 교수 고발을 철회하면서도 사과 대신 안철수 지지자라서 선거법 위반인 건 맞다는 식으로 나왔다.)

그러나 한 주 만에 여당은 많은 쟁점에서 저자세로 돌아섰다.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여론조사뿐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든 바뀐 여론을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2월 18일 국회 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 검찰 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전 국무총리이자



2월 13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 총선 앞두고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전염병 관리가 아닌 기업주 지원 대책만 논의한 정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이 임 교수 고발은 겸손을 잃은 행태라며 사과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에서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을 상대로 대선 전 조기 전이자 이번 총선을 상징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조국 수호를 비판했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 선거구에 당내 경선 경쟁자로 강경 조국 수호파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했다.

사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여당의 위기감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여당은 위기일수록 핵심 지지 기반에 충실해야 한다는 자세였다. 그래서 실은 임 교수 고발 자체가 위기감의 발로였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전통적 지지층과 정계·재계·법조계·학계 등의 상층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이른바 86세대 집단이 민주당의 핵심 기반이다. 그들의 조국 방어 논리가 청년층 서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기득권 옹호의 성격을 띠었던 이유다.

기업 지원 확대 약속

이러한 정치 불안정이 단지 여야 대결의 격렬함이나 부패에 대한 서민 청년들의 불만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에는 더 깊고 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나쁘고, 임기 1년 즈음에 지지율 재상승의 추진력이 돼 준 남북 화해 조짐도 새로운 진척 없이 지지부진하다. 여당은 집권 후 줄곧 촛불 운동에 참가한 보통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진보 개혁 약속들을 거의 다 나 몰라라 하거나 저버렸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졌을 뿐 아니라 감염증 확산이 경제에 위축 효과도 내고 있다. 중국에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타격도 있지만, 민간 서비스 부분에서 소비가 위축된 것의 영향도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반 문제뿐 아니라, 또 진영 논리뿐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까지도 도마에 오른 것이다. 2017년 대선과 임기 초반에 사회 상층부가 문재인에게 지지를 제공했던 것은 문재인이 사회 상층부의 부패와 특권에 분노한 대중을 달래어 정치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노동개혁 등 경제 위기에 잘 대처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더디지만 노력해 왔다. 반일 민족주의, 검찰 개혁, “노동 존중”과 “사회적 대화”, 진보계 출신자 일부 등용 등 포퓰리즘적 책략을 부림으로써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달래려 애써 왔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은 기업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연일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 안 된다며, 과거에 어땠는지에 구애받지 말고, 경기 진작과 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관료들을 채근하고 있다.(전염병 관리를 위한 특단

의 대책이 아니라!)

2월 13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SK, LG, 현대차 등 재계 총수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다.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재계가 기존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약속을 이행해 주변 정부가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17일 혁신 성장 분야에 45조 원이 넘는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도 문재인처럼 전국의 기업체를 돌며 기업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결국 기업인들은 코로나19 사태와 여당의 지지율 위기를 현 정부를 더욱 친기업적으로(오른쪽으로) 유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말이다. 국방부는 최근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주로 미군과 연계된) 해외 연합 군사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3년간 짜질한 언행이나 남발하면서 분열해 있던 우파가 (갈등 요인을 해소하지도 않은 채로) 서둘러 재통합한 것은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다.

물론 문재인은 사회적 대화나 지소미아 연장 종료 등 진보진영 상층 지도자들을 달랠 포퓰리즘 언사도 계속 동시에 취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그럴듯한 말로 기대만 키우다가 뒤늦게 친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즉, 문재인이 말과 행동을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

노동운동이 우파의 부활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를 감싸거나 옹호해서는(총선에서) 우파의 부활도, 노동개혁도, 각종 친기업 개혁도 막을 수 없다. 민주당 정부의 개혁 배신, 위선, 부패에 불만과 염증을 내는 대중을 더 적극 대변해 지배계급이 세력균형을 오른쪽으로 되돌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단기적 손실을 겁내다가 장기적 이득을 놓치는 기회주의적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외주화·노동조건 악화 위협

특수선 노동자 전환배치 반대한다

김경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현대중공업 사측이 특수선(군함)사업부에서 용접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전환배치하려고 한다. 사측은 이 노동자들을 LNG추진선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인 이중연료(DF)탱크 제작 공정에 투입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전환배치에 불만이 있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다.

사측은 1년만 파견 나갔다 복귀하는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사측이 처음에는 ‘전출’이라고 했다가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그간 직·간접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경험했다.

아마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는 하청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특수선 부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 왔다. 단기 계약직인 물량팀 노동자들도 들어와서 일한다. 그래서 전환배치 대상자인 노동자들은 외주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하락할 수 있다.

DF탱크 제작은 노동강도가 꽤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LNG를 보관해야 하는 특성상 DF탱크에 사용되는 철판은 니켈 함유량이 많다. 그러면 일반 선박의 철판보다 용접성이 떨어져서 작업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용접 노동자는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용접 부위를 가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니켈 함유량이 많으면 잘 갈리지도 않아서 그라

인더 작업이 더 어렵다.

일반적인 철판 용접을 하면, 용접을 거의 다 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별도의 노동자가 한다. 하지만 DF탱크 제작에서는 용접 작업자가 그라인더 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용접하면 온갖 유해 물질이 나온다. 철판과 용접 기술의 종류에 따라 다른 물질이 나온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DF탱크를 처음 제작하기 때문에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자료가 없다. 노동자들이 아무 대책 없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원래 DF탱크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하던 일이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의 이직이 잦아 불량이

율이 높았다. 안정적 수급을 바라는 현대중공업은 제작을 직접 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가져온 DF탱크 물량의 일부는 현대중공업 공장에서도 만들지만, 일부는 인근에 있는 세진중공업에서 만든다. 사측은 두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해 노동자들을 더 압박하려 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

게다가 이번 전환배치는 대우조선 인수합병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 사측은 특수선 물량이 없으니 ‘유휴인력’을 해결하려면 전환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에도 특수선의 특성상 항상 물량이 있진 않았다. 그래도 일반 선박과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함부로 다른 곳에 보내지 않았다. 특수선 물량이 없으면 일반 조선 물량을 투입해 인력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유휴인력’을 운운하면서 전환배치를 시도하는 것은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앞둔 구조조정의 일환일 수 있다. 지난해 인수합병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대우조선 특수선 부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부문을 구조조정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수익성을 위해 여기저기 넣었다 뺐수 있는 기계 부품이 아니다. 사측은 당장 전환배치 추진을 중단하라. 노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대중공업지부와 현장 활동가들은 전환배치에 반대해 항의를 조직해야 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본격화

기업주들은 전폭 지원, 노동자들은 ‘알아서 해라’?

장호중

서울, 대구 등지에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단계에 진입한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크루즈 선박에 격리된 한국인들을 ‘대통령 전용기로 데려온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그 사이에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병원체가 크게 확산돼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감염자의 경로를 쫓아다니는 일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별 구실을 못 한다.

지역사회 감염 단계가 되면 증상 초기에 확진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다.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커 이들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게 핵심 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 후베이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에서는 아직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가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전체 환자의 최대 20퍼센트가 중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려면 국립병원 등 일부 병원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병원을 찾는 수많은 기침, 발열 증상 환자들을 모두 보건소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네 병원이나 의원들은 아직 이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 심지어 마스크와 장갑도 알아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될 경우 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번[메르스]엔 병원 감염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병원들이 열심히 준



택배 물품을 나르는 노동자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위험을 확산할 가능성도 큰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비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휘도 상당히 나아졌다. 그런데 만약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비는 훨씬 덜 됐다. ... 역학조사관이 전국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한다든지, 보건소에도 여러 종류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든지 등등 ... 대비 태세를 갖추는 길밖에 없다.”(2월 18일자〈한겨레〉)

최근 환자 10여 명이 확인된 대구 지역에 소속된 역학조사관은 단 두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인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공공부문,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는 접촉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충분히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노동자들은 당장 마스크와 장갑도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무급 휴가

한 우체국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주민과 제일 접촉이 많은 공무원 집배원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집배원들에게는 하루에 고작 마스크 한 개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장갑도 부족하고요. 우체국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국내 환자가 발생한 지 한참 뒤에야 마스크가 지급됐

습니다.”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감염 확산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고용주가 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일을 쉬라는 식으로는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일하려 나서서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염이 의심돼 격리를 권고한다면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성 있는 조치다.

배달, 택시, 대리운전 노동자 등 이른바 ‘사용자’가 없는 것처럼 위장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정부가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예방 교육도 해야 한다. 격리가 필요한 경우 정

부가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몬 것이 정부이므로 질병 대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월 20일 정부에 이런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동자 보호에는 느려 터지고 둔감한 정부지만 기업주들의 아우성에는 즉각 화답하고 있다. 정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피해’ 기업에 25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재벌 총수들과 기업주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다.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징계 중단하라

신정환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참여했던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열차 운행 거부에 돌입하기 위해 1월 20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노동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됐다. 2월 17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사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감사실 소환 조사 후 인사처에서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 및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최근 사측은 징계 대상자에 144명을 더 추가해 총 징계 대상자가 무려 485명에 달한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까지 위반하며 노동시간 연장 조치를 일방 강행했던 사측이 이에 맞서 저항한 것을 이유로 탄압하는 것은 완

전 부당하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운전·승무 노동자들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대폭 강화에 맞서 집단적 저항에 나선 것은 정당한 행동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징계 시도는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이번 투쟁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원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따른 쟁의 절차 없이 운전·승무 노동자 전체가 열차 운행 거부에 나설 태세였다.

‘적자 공기업 노동자들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이기적인 불법 행동을 일삼는다’는 사측과 보수 언론의 비난 속에서 열차 운행 거부를 위한 총회에 대거 참가했다.

결국 사측은 열차 운행이 실제로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실질적 위협을 느끼고 결국 운전 시간 연장 조치를 철회



1월 20일 열차 운행 거부 투쟁에 돌입하기 위해 총회로 집결한 노동자들

했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태세가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자 사측은 집단적 투쟁에 나선 조합원들 중 일부를 선별해 개별 근무 태도 문제로 둔갑시켜 징계하려 나섰다. ‘투쟁에 나서 봐야 개인만 불이익을

볼 뿐’이라는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속셈이다. 노동자들의 결속력 저해를 노리면서 다음 번 투쟁의 힘을 빼놓으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측의 이런 시도가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계 대상자들을 방

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의 소환 조사가 시작되자, 노조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 대응을 하지 말고 노조 지침에 따랐다고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총회 참석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이 노조의 집단적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이런 노조의 지침은 필요조치다.

그리고 노조는 서울시에 징계 추진 문제에 대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전개 상황을 봐 가며 징계에 반대하는 활동을 조직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징계 시도에 맞서 징계 대상자들을 잘 방어해 내 투쟁력 약화 시도를 좌절시키자. 그래야 향후 사측이 노동조건 공격에 쉽사리 나서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드러낸 코로나19

“코로나19”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미 사망자 수는 2002~2003년 사스(이 역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었다) 발병 당시 사망자 수를 훌쩍 넘어, 2월 17일 현재 약 1775명에 이르렀다. 감염자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19가 마치 엑스레이처럼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를 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스 역시 중국에서 발발했지만, 현재 중국 경제는 그때보다 규모가 네 배나 크다.

코로나19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을 마비시켰다. 중국 정부는 연장된 춘절 연휴가 끝나는 2월 10일부터는 일터로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발표했다. 그러나 2월 12일 중국의 여객 수송량은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85퍼센트 줄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소장은 2020년 1사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2퍼센트로 떨어질 것이라 추산했다. 지난해 1사분기 성장률 6.4퍼센트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이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 전 세계 재화·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국 업체들은 구리·천연가스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주문을 줄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동 통제 때문에 굶어 죽은 가축들을 대신할 살아 있는 닭을 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애플사 제품을 조립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 중국과 미국, 세계경제의 긴밀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타격은 공급 측에서 벌어질 공산이 크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업 경제로 부상한 것은 세계적 생산 체계 재편에 따른 것이었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적 생산망을 발전시키면서 노동집약적인 조립 라인을 특히 동아시아·동남아시아로 외주화했다.

그 전형적 사례가 대만 기업 폭스콘이다. 폭스콘은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해 중국에서 애플사(社) 제품을 조립한다.

중국 정부는 경제를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모국에 남아있는) 연구·개발

은 고부가가치 활동이 중국에서도 이뤄지게 하려 한다.

현재 중국은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전기·전자 부품의 30퍼센트를 생산한다. 미국은 물론 아시아 경제 대국들도 중국이 수출하는 기계나 운송 장비에 크게 의존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은 “중국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자동차 부품·부대용품 수출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다. 지난 10년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차용] 모터 수출 산업이 네 배로 커지는 동안 이 부문도 세 배로 커졌다.”

제조업은 이미 전 세계에서 부진

한 상태다. 알리안츠연구소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제조업 부문이 2020년 상반기 내내 불황일 공산이 크다. 전자·컴퓨터 부문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도 세계적 공급 사슬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취약하긴 마찬가지다. 한 〈파이낸셜 타임스〉칼럼니스트가 지적했듯이 거대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곤경에 처해 있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 내연기관의 불확실한 앞날과 전기차의 부상, 브렉시트 무역장벽, … 여기에 미국발 무역전쟁까지. 이 모두가 유럽과 미국의 산업 불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황에 일조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이 생길 수도 있다. 트럼프의 무역 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미국의 의약품 공급 사슬이 완성 의약품, 약제, (현재 수요가 폭등한 마스크 같은) 의료용품을 중국에 너무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2월 12일 나바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오랫동안 수면 아래 있었지만 미국 경제와 안보의 치명적인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종이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전 지구적 전염병 확산에 취약해진 인류의 물리적 처지나, 세계적 공급 사슬에 의존하는 경제 같은 세계화의 영향을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이른바 “탈세계화”, 즉 선진국 경제가 생산을 자국으로 되돌리려 하는 흐름을 더한층 가속화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현대 자본주의의 병세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92호 / 번역 김준호

프랑스 연금 개악 저지 투쟁

다시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과 위기에 처한 마크롱

찰리 킴버

영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편집자

파업이 지속되면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엘 마크롱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뉼엘 마크롱은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다.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국내 사안에서 누적되는 어려움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당은 꼬트머리부터 부서지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전진하는 공화국’당은 의회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당은 3월 지방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에 마크롱의 최측근인 벤자맹 그리보가 파리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성 동영상이 유출돼 후보직을 사퇴했다. [남성인 그는 그간 가족 가치



2월 14일 파업에 나서며 파리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병원 노동자들

를 중시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동영상 유출로 위신이 크게 실추됐다.]

마크롱의 연금 개악에 맞선 파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여론 조사를 봐도 여전히 파업 지지 여론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17일 몇몇 철도 노동자들과 파리 교통공단(RATP)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연금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가는 날에 맞춰 행동을 벌인 것이다. 의회 내 좌파적 의원들은

연금 개악안에 대한 수정안을 2만 건 제출했다.

17일 파업에는 일부 혼란이 있었지만, 이전 파업들에 견주면 훨씬 작았다.

파리 서쪽 외곽 도시 낭테르에서 파업에 참가한 버스 노동자 알랭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버스 차고지는 조직이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4시간 동안 차고지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투쟁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한 번 중단했던 파업을, 그것도 한참 만에 다시 시작하려니 사람들을 파업에 참여시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투적인

흔히 가장 전투적인 노동조합으로 여겨지는 노동총동맹(CGT)이 17일 파업과 시위를 공식 지원했다면 이날 행동은 훨씬 더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총동맹은 2월 20일에 전국적인 파업 행동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파업을 벌이는 것은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파업 전날인 16일, 몇몇 부문의 기층 조합원들은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3월 초에 준비 중인 전국 총회에서 만납시다. 소속 노조를 막론하고, 또 비조합원까지도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실질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질 투쟁 계획을 세웁시다.

“단발적인 투쟁만이 이어지거나, 부

문별 투쟁이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이런 투쟁 계획을 발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손으로 투쟁 방향을 결정하고, 마크롱과 그가 추진하는 개악에 맞서 모두 단결할 방법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2월 14일에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 수많은 이들이 파리에서 시위했다. 노동자들은 이런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병원은 돈벌이가 아니다.”

2월 15일에는 피레네와 알프스산맥의 스키 리조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리조트 200곳 중 5분의 1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계절 노동자들 약 100만 명이 1년 중 6개월 동안만 리조트에 고용된다. 나머지 기간에는 비정기적인 일만 한다.

마크롱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려면 모든 투쟁이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692호 / 번역 김지혜

영국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로라 마일스의 방한강연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차별과 해방

로라 마일스 트랜스 여성 마르크스주의자

이 글은 2018년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마르크스주의 포럼 '말시즘2018'에서 로라 마일스하단 사진가 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로라 마일스는 당시 영국 대학노동자(UCU) 전국집행위원이었고,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며, 트랜스젠더 해방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책갈피)이 있다. 사각 괄호([]) 안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추가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차별과 해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그것을 둘러싼 조건과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어떤 나라에서는 성소수자 처지가 나아졌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악화했습니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자금심 행진이 금지됐고 경찰에게 공격 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트랜스젠더들이 운전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정부가 트랜스젠더를 정신 질환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에서는 몇 년간 자금심 행진이 경찰과 파시스트 정당인 우익의 당원들에게 공격당해 왔습니다.

저는 영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릴 텐데, 있다가 여러분에게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나옴이 허시는 영국에서 가장 최근에 살해당한 트랜스 여성으로, 두 달 전 런던의 호텔 방에서 한에 찔려 죽었습니다. 많은 트랜스 여성들처럼 그녀도 유색인이었습니다. [영국 등 서구에서] 살해당한 트랜스 여성 중에는 유독 유색인이 많습니다.(자료사진1)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는 트랜스젠더들은 국제적으로도 많습니다. 예컨대, 2016년과 올해[2018년] 유엔 보고서는 트랜스젠더와 여타 성소수자의 처지가 세계 도처에서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위협받는 정권에게 성소수자들은 손쉬운 마녀사냥감



말시즘2018에서 연설하는 로라 마일스



"트랜스젠더의 삶도 아름답다"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자금심 행진

입니다. 유엔 보고서를 보면 성소수자를 범죄시하거나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을 유지하는 나라가 여전히 76개이나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트랜스젠더 살해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영국의 주요 성소수자 단체인 스톤월의 보고서를 보면, 영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은 지난 4년 동안 80퍼센트 늘었습니다. 2016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에는 혐오 범죄가 41퍼센트나 치솟았습니다. 2016~2017년 동안 성소수자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혐오 범죄나 혐오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성소수자 10만 8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가 실시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설문 조사였습니다. 이를 보면 음탕자

40퍼센트가 지난해에 동성애혐오나 트랜스혐오를 경험했습니다. 또, 23퍼센트는 일터에서 성소수자이거나 성소수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시선이 섞인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작 450만 파운드(70억 원)밖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는 예산에 혐오 범죄가 41퍼센트나 치솟았습니

사회주의 운동의 성소수자 방어 전통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선, 사회주의 운동은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 싸운 오랜 전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역사가 너무 많이 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30년대 나치즘과 스탈린주의 때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권리 운동과 그 운동가들은 대개 사회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거나 그 자신이 사회주의 운동가였습니다. (당시에는 동성애 같은 성적 지향과 트랜스젠더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20세기 초가 돼서야, 어쩌면 20세기 중엽이 돼서야 트랜스젠더가 성적 지향과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인물은 에드워드 카번터입니다. 그는 19세기 말 영국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요구한 활동가였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큰 이슈였 습니다. 당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심각한 외설죄'로 2년 간 수감되고, 출소하고 얼마 안 돼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카번터는 사회주의자였고 독립노동당 당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마그누스 히르슈펠트입니다. 제1차세계대전 이전부터 독일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 사회민주당(SPD) 당원이었는데, 당시 사민당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는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을 동성애자와 구별해서 다른 최초의 인물입니다. 또, 그는 처음으로 성적 지향을 연구하는 의학 연구를 차렸습니다. 그의 연구소에서는 이른바 '성전환 수술'을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레닌과 볼셰비키 당도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민족자결권, 여성과 모든 차별받는 자들의 권리를 지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소수자 권에 보장에 기여한 역사를 오늘날 많은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알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볼셰비키는 동성애

를 금하는 법률을 모조리 폐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르(러시아 황제) 시절의 법률을 제거하고자 전반적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성관행 습나 연령을 폐지하고, 이혼과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14개국 군대와 백군을 상대로 내전을 벌이고 기근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이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1922년의 법률은 동성애든 이성애든, 상대방에게 위해만 가지지 않으면 모든 연인 관계를 인민의 권리로 보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적 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을 위한 권리에 기초한 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1933년 독일 베를린에서 나치들이 히르슈펠트의 연구소를 폭대 발으로 만드는 모습입니다.(자료사진 2) 히틀러는 히르슈펠트를 '독일에서 가장 위험한 유대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히르슈펠트 연구소는 폐쇄됐고 모든 책은 불태워졌습니다. 히르슈펠트가 목숨을 건진 것은 때마침 외국에 나가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스탈린 치하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33년 스탈린은 동성애를 도로 범죄화했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급격한 산업화·집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인구를 늘리려 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에

게 훈장까지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자나 통상적인 성별 표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모조리 체제 전복적이고 퇴폐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는 나치가 바 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성장한 동성애 클럽들을 파괴했습니다. 많게는 성소수자 5만 명이 강제수용소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수가 서독의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치 시대 법을 서독 정부가 1950년대까지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1930년대의 경험 탓에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연관 맺었던 역사는 잊혔고 재발굴돼야 했습니다.

전쟁 이후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투쟁이 회복하는 과정은 느렸지만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 투쟁은 1960년대에 다시 크게 분출했습니다. 1960년대는 각종 저항과 투쟁이 크게 벌어진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그랬 습니다.

당시 트랜스젠더들이 최초로 벌인 투쟁 하나가 1966년 샌프란시스코에 서 일어난 콤포트 식당 항쟁입니다. 성



자료사진, 2014년 혐오 범죄로 살해당한 미국 트랜스젠더들 매년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소수자들이 사회적 교류 공간에 접근할 권리를 둘러싼 투쟁이었습니다. 젊은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들은 출입할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식당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랜스젠더가 기본적 인 시민권을 인정받았습니다. 1969년에 벌어진 스톤월 항쟁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톤월 반란을 가장 잘 다룬 마틴 듀버먼의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스톤월 항쟁을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니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톤월은 뉴욕에서 파파이가 운영하던 클럽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곳을 찾은 성소수자들을 수시로 괴롭혔고, 결국 1969년 6월 어느 날 성소수자들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마다 전투가 벌어졌고 경찰이 결국 밀려났습니다.

자금심 행진은 바로 이 스톤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처음으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들이 비참함과 무력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 스스로 펼쳐 일어나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톤월 항쟁을 단지 동성애자들의 역사로만 서술합니다. 그러나 당시 투쟁을 이끈 사람들 중에는 트랜스젠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실비아 리베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간을 내서 그녀에 대해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녀는 '동성애자해방전선'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 조직은 분명하게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본받아 전투적인 저항 조직을 표방했습니다. 리베라는 자신을 혁명가로 소개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급진 분자이자 혁명가였고 지금도 혁명가다. 스톤월 반란의 일

원이었다는 사실에 기쁘다. 당시 누군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며 '어머, 세상에! 혁명이 시작됐네, 혁명이 시작됐어!' 하고 생각한 것이 기억난다." 리베라는 10여 년 전[2002년]에 52세라는 매우 젊은 나이로, 가난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트랜스 혐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스톤월 항쟁 1년 후 뉴욕에서 열린 최초의 자금심 행진을 준비한 일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도시, 많은 나라에서 자금심 행진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수는 없으니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국에서 자금심 행진을 그저 자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맺고 고취하는 행사가 아닌 정치적 항의로 발전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성별 자기 결정권

영국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투쟁은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성별 자기 결정권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같은 쟁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국의 성별인정법은 성별 인정 증명서를 받으면 출생 증명서의 성별을 고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아주 지난하고 관료적이며 의학적 검사를 요합니다. 정신 의료 기관에서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해당 성별로 생활한 후 그 증거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년 전[2016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검토한 영국 정부는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자기 의사만으로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몇몇 다른 나라, 예컨대 아일랜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나자 대단한 논



자료사진2, 1918년 독일 혁명으로 트랜스젠더를 위한 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생겼지만 이후 나치가 집권해서 파괴했다

쟁이 벌어졌습니다. 우파와 극우, 일부 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간이 성별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이를 법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페미니스트들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본질주의[여성임이나 남성임을 규정하는 어떤 고정불변한 속성이 있다는 관점]가 깔려 있습니다. 즉, 트랜스 여성도 여전히 남성이며, 모든 남성은 잠재적 성폭력범이고 폭력적이나, 여성만의 공간(여자 화장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여성 병동 등)에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만의 안전한 공간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에 안타깝게도 소수 좌파 인사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당과 노동조합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차별받는 집단이고 사회주의자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파가 이 문제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좌파적 수사로 치장한 우파적 주장에 타협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논바이너리[남녀 이분법적 성별 규정을 벗어나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는 사람들로 규정하든,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을 택하고자 하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자는 이를 문제 삼아선 안 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이 하는 구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언제나 차별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성 차별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차별은 계급 사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고고학계에서 수집한 역사적 증거나 현대에 남아 있는 전통 사회와의 비교 연구에서 수집한 비교 증거를 보면, 아주 오래 전에는 성별 구분을 뛰어넘는 행동이나 동성애에 사회가 더 관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렵채집 사회에

서도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출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가치가 곧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생산력, 즉 재화를 생산하는 도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경과 농업 기술이 등장하고, 소수 사람들이 부와 재화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사회가 계급으로 나뉘면서 지배계급이 등장했고, 지배계급은 가족이나 자손을 통해 잉여 생산물을 계속해서 확실하게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단속해야 했습니다. 또, 이성을 벗어난거나, 신성 계급 사회의 성별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금지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가족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과 성별 규범을 단속하는 일은 단지 자본주의가 아니라 계급 사회 일반과 함께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권리, 더 정확히는 성소수자의 권리 부재는 우리가 사는 [또 다른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체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내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싸울 수는 있지만 성소수자 차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자본주의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평등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언제든 도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역사를 보면 일부 권리가 인정됐다가 이후 도로 후퇴한 사례가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변혁할 때에만 모든 차별받는 집단의 해방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도 많았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 활동가 다수는 이런저런 종류의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성 이론, 특권 이론, 퀴어 이론 등은 모두 정체성 정치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활동을

▶ 7면에서 이어짐

가들은 그런 관점을 최소한 공유하면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차별에 맞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같은 정체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활동할 때는 매우 사려 깊어야 합니다. 우리는 차별에 대한 분노라는 출발점을 그들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걸로 드러나는 차별의 근저에 있는 것을 보려 합니다. 즉, 차별이 계급 사회와 가족의 성격, 재생산 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존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도, 정체성

정치가 왜 틀렸는지 논쟁해야 합니다.

정체성 정치는 계급을 차별 문제의 핵심 측면으로 보지 않고, 계급을 핵심 축으로 보지 않으며, 계급 투쟁을 사회를 변혁할 방법으로 보지 않고, 노동계급을 그런 변혁의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시즘에서는 1980년대에 계급 투쟁이 후퇴하고 포스트모던 사상이 유행한 것을 다룬 워크숍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한물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성소수자들이 트럼프 반대 시위에 동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의 임무는 그들에

게 좌파가 오랫동안 훌륭하게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해 왔음을 보여주고, 정체성별로 나뉘어 투쟁하기보다는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싸우자고, 계급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고 삶의 방식 전반을 바꾸자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분은 레슬리 파인버그입니다.(자료사진3) 그녀는 1996년에 《트랜스젠더 투사》[국내 미번역]라는 대단히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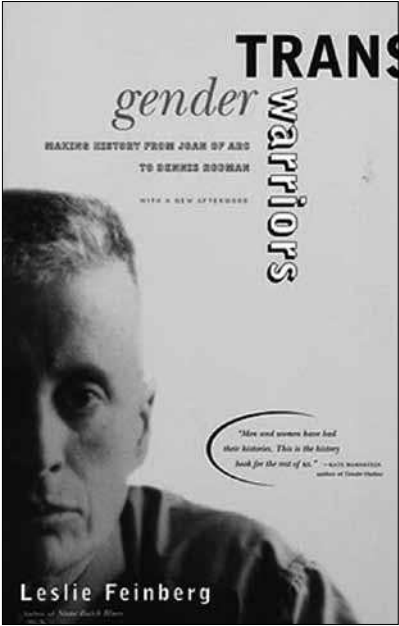
그녀는 미국인 마르크스주의자, 정확히는 트로츠키주의자였고 트랜스젠더이자 레즈비언이었고 수십 년 동안

전투적인 노동운동 투사였습니다.

이 책에는 엥겔스의 고전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인버그는 혁명 이후 사회가 성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서술합니다.

“모든 일하는 인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경제 체제를 세우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트랜스젠더인 우리가 해방하려면, 증오·불의·편견을 조장해 득을 보는 계급이 없고 성과 젠더와 사랑을 제약하는 법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사진3.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차별 문제를 개척한 레슬리 파인버그

토론 정리 발언

흥미로운 질문과 주장으로 기여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다만, 여기 오기 전에 갖 집필을 끝낸 제 책이 오늘 제기된 많은 논점들을 다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트랜스젠더 저항》입니다.

교차성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해 주신 정진희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시간을 벌었네요.

말씀하셨다시피 교차성 이론은 원래 다중적 차별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처음 등장했던 시점에는 일보 전진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특히 백인 중심인 미국 부르주아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을 다루려는 시도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부르주아 페미니즘 운동은 대체로 백인 위주였고 백인 여성들이 마치 흑인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문제가 있었죠.

교차성 이론은 다중적 차별의 존재를 꽤 잘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첩되고 또 그 연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합니다.

성소수자 운동이나 여성 운동 내 많은 활동가들이 ‘교차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그저 현실을 묘사하는 용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차성 이론이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제시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동지들께서 제기하신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성전환 수술에 대해 한 동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영국에도 아주 비슷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성별 정체성 클리닉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한 곳뿐입니다.

반면 관련 의사나 클리닉을 찾는 트랜스젠더는 최근 크게 늘었고 특히 청소년 이하 연령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 관련 예산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의사 접견까지 적어도 2년을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방을 받기까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성별 전환 비용을 모두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성형이나 제모 수술 비용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트랜스젠더들은 일반적인 진료나 도움을 받으려 병원에 가도 차별을 경험합니다. 근무자들이 관

련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의 성별인정법에는 결혼한 사람이 성별 정정을 하려고 할 경우, 배우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성기 수술이 성별 정정 신청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많은 요건들도 없애려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노동조합 운동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한 동지께서 아일랜드의 성별인정법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이고 과거에 대단히 보수적인 나라였다고 그 동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아일랜드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돼 2015년에 동성결혼이 허용됐고, 같은 해 성별인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낙태권 운동이 대단히 활력 있게 벌어져 국민투표에서 3분의 2의 지지로 낙태를 금지하던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고위 성직자들과 기독교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쟁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투쟁 수준이 매우 높았던 덕분입니다.

예컨대 정부의 수도세 징수에 반대하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단결해서 지역 사회와 노동조합에 깊숙이 들어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한 환멸이 결합됐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가 여성과 아동을 학대했다는 스캔들이 터진 것입니다. 이런 요인 덕분에 교회와 보수적 기독교 층의 영향력은 줄고 노동계급의 자신감은 높아졌습니다.

아일랜드 사례는 아주 보수적인 나라도 몇 년만에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일랜드의 성별 인정법은 자신의 의사만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영국보다 진일보한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그냥 성별 정정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남은 생애를 새 성별로 살면 됩니다.

이후 화장실에서 생물학적 여성이 공격 당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

다. 이를 보면 성별 자기 결정권을 반대하는 온갖 주장은 공언히 공포를 부추기는 것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고위 성직자들과 기독교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쟁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별을 둘러싼 분쟁에 탄력이 불기 쉽습니다. 예컨대, 영국에서 우익들은 [좌파적인] 노동당

▶ 9면으로 이어짐

아일랜드는 보수적인 사회도 투쟁으로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사진은 2018년 낙태죄 폐지를 쟁취한 여성과 남성들이 기뻐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성별 임금격차 그대로

정진희

3.8 세계 여성의 날이 다가오면서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때 OECD 1위인 성별 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15퍼센트)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한국은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자리를 지켰다. (정규직 전일제 기준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34.6퍼센트나 적게 받는다. 지난해 9월, 한국노총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월평균임금 기준)는 37.1퍼센트에 달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능력 부족이나 특정 직업 선호 때문이 아니라 구조화된 여성 차별을 나타낸다.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내내 지속되지만, 30대 이후 급격히 확대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진다. 55~59세에는 그 격차가 무려 48.6퍼센트다(2019년 한국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고, 재취업 시 흔히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여성 차별과 양육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 뒤 여성의 직장 복귀율은 매우 낮다. 올해 2월 발표된 자료에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3년 전보다 늘었지만 휴직 뒤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은 전체의 43.2퍼센트에 그쳤다(2019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같은 조사에서 결혼, 임신·출산, 양육, 가족돌봄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3명 가운데 1명(35퍼센트)이었다. 평균 28.4세에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해 재취업까지 평균 7.8년이 걸렸다.

그러나 복귀 뒤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임금도 낮아졌다. 경력단절 이전



‘말로만 개혁’의 대표 사례 ‘여성’, ‘노동’ 2018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엔 상용근로자 비율이 83.4퍼센트였으나, 단절 뒤에는 55퍼센트로 28.4퍼센트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7.8퍼센트에서 14.6퍼센트로 늘었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의 임금도 단절 이전(218만 5000원)의 87.6퍼센트 수준(평균 191만 5000원)에 그쳤다.

여성이 주로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상황도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 요인이다.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다수가 저임금 직종이다. 성별 직종분리뿐 아니라 같은 직종 내에서도 흔히 여성은 더 낮은 지위를 차지한다. 승진 차별이 만연하고 여성의 업무는 보통 저평가된다.

생색내기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생색내기로 일관해 왔다. 대선 때는 성별 임금격차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실질적 대책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지의 채용 성차별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이를 뿌리 뽑을 대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설 이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는데 20대 여성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올해 2월 정부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이 역시 생색내기에 가깝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보고서를 다 낼지도 의문이지만, 보고서를 낸들 임금을 낮추고 실적 경쟁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데 혈안이 된 사용자들이 성차별을 얼마나 인정하겠는가. 성차별은 임금 비용을 낮추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데 유용하기에 공공기관과 특히 대기업에서 널리 사용된다.

사용자들이 성별 임금격차를 합리화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해소 방안을 낼 공산이 크다. 기껏해야 관리자나 기업 임원에 여성을 소수 늘리는 방안이 되기 쉽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체 규모, 직업, 학력, 성별 등에 따른 임금격차 정보도 공개했다(새로운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라 위 항목별 격차를 더 손쉽게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의 목적도 저임금 문제 해결과 무관한데, 정부가 밝혔듯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직무급제를 저임금·여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선

적인 속임수다. 직무급제는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일 뿐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입하는 직무급제(표준임금체계)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평생 유지한다는 것만 봐도 이 점을 잘 알 수 있다. (직무급제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본지 260호 김하영,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를 참조하시오.)

여성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했다. 더 나아가 올해 최저임금제도를 더한층 개악하려 한다.

문재인은 ‘성평등’을 말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대책을 강조하지만, 실은 자본가들을 위해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 목적이다. 이는 지금 같은 불황기에 특히 요긴하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핵심적인 경력단절 대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은 여성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2019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재취업 때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이 10명 가운데 8명(79.2퍼센트)이었

음이 드러났다. 2016년(49.4퍼센트)보다 무려 3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바람과 동떨어진, 지배계급을 위한 대책일 뿐이다.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의 저임금도 해소돼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필요하다. 공공보육 시설도 대폭 확대해 노동계급 여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고위직이나 관리직에 여성의 진출을 강조한다. 여성의 유리천장은 깨져야 마땅하지만, 고위직이나 관리직에 여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동계급 여성들의 처지가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기업주들의 임금 공격이 강화되고 문재인 정부도 노동 개악을 노골화하는 지금, 임금 인상과 공공보육 확대 등을 위해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중요성은 2018년 조합원들의 성별 임금격차(20.4퍼센트)가 노조가 없는 곳의 노동자들(36.7퍼센트)보다 더 낮다는 데서도 확인된다(통계청).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비조합원의 성별 임금격차(22.6퍼센트)도 미조직 부문보다 낮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성별 임금격차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도 사용자들의 공세 강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투쟁이 충분치 못했던 것과 관련 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축소된 시기는 계급 투쟁의 상승기 때였다.

여성의 평등한 임금은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는 더 광범한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중시하는 사회를 위한 투쟁은 사회에서 여성 노동이 취급받는 방식도 바꿀 것이다.

▶ 8면에서 이어짐

지도부에게 유대인 혐오적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비방을 퍼붓고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렇게까지 전면화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동지께서 차별받는 집단들 사이의 단결은 자동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적지 않은 성소수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적지 않은 성소수자들이 [파시스트인] 마린 르펜과 국민전선을 지지했죠.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무슬림혐오가 부상하고, 일부 성소수자들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작은 성소수자 집단이 파시스트 조직인 영국수호연맹(EDL)을 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이슬람과 무슬림을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차별받는 집단들이 저절로 단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두 노동자이고 착취당한다는 사실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판매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중간이든 뭐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취와 지배계급에 맞서는 저항에서 단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 동지께서 성소수자 권리의 정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려는 권리는 나답게 살 권

리, 자기 의사대로 스스로를 표현할 권리,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도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권리와 자유

한 동지께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성소수자들과 연관 맺는 법에 관해 가장 좋은 지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역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권리와 연관된 사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 말입니다.

성소수자 운동이 19세기 말에 부상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동성 간 성행위가 동성애라는 개념으로 구분되기 시작했고, 동성애에 대한 적대감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이는 지배자들이 가족을 재확립하고 부르주아적

가족 개념에 기반을 둔 핵가족 모델을 확립하려 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회주의자들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재확립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조합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와 노조에서 자긍심 행진이 정치적 항의 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핑크 워싱’[기업이나 주류 정치인들이 돈벌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소수자 친화적 연사를 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한 동지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도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사회자유주의적 요소도 품고 있어서 특정 시기에는 약간의 알량한 권리를 인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우리를 더 잘 착취하기 위해 ‘핑크 워싱’을 합니다.

차별받는 집단들이 저절로 단결하지는 않지만, 몇 달이나 몇 년 안에 닥쳐올 공격에 맞설 공동전선을 위해 우리는 분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취 한가은 / 번역 김중환

이번 호 <노동자 연대>에는 더 많은 트랜스젠더 관련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 로라 마일스가 트랜스젠더 비판적 페미니스트·사회주의자들과의 논쟁을 다룬 ‘오늘날의 트랜스젠더 혐오와 그에 맞선 투쟁’

★ 추천 트랜스젠더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혐오의 현실

사회연대기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단결에 도움 될까

강동훈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하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비난해 왔다. 이에 대응해 노동조합 고위 상근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불평등 격차 해소 등에 나서는 방안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생각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온건 진보(이하 개혁주의) 정치인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사회연대전략은 이런 옳은 취지를 잘못 구체화하고 있다.

그 '전략'은 노동조합이 미조직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양보나 세금, 복지 비용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 전제돼 있다. 이러한 양보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면, 자본을 압박하는 사회적 여론이 생겨, 노동운동에 유리하다고 한다. 과연 이런 정치적 메커니즘이 현실적일까?

최근에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은 2020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제안들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액 인상하자는 기존의 요구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연대임금' 명목으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기금으로 내면 사용자 측도 출연해 근로복지기금이나 재단 등(이하 사회연대기금)을 만드는 안들도 있다고 한다.

한국노총도 최근 2020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월 정액 29만 4417원 인상에 더해 '월·하청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치'도 포함돼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임금인상분 내에서 일정 비율을 공동 출연해, 하청 노동자에게도 복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사회연대기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미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을 비롯한 여러 노조들이 제안해 실행한 바 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는 2018년부터 시행된 SK이노베이션의 '1퍼센트행복나눔기금'과 2019년에 출범한 사무금융노조의 '우분투재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몇 년 동안 수조 원의 이익을 챙겼지만, 그중 0.1퍼센트기량만 행복나눔기금에 투입하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듯 품을 잡고 있다

단'이다. SK이노베이션은 노동자들이 기본급의 1퍼센트를 출연하면 사용자 측도 그에 상응해 출연해 기금을 조성했다. 사무금융노조도 사용자 측과 협상해 사용자 측의 출연으로 '우분투재단'을 조성했다. 이 기금의 일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쓰이고, 다른 일부는 지역사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회연대기금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턱없이 모자란

그러나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과연 현실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는 따져 봐야 한다.

우선, 사회연대기금은 비정규직 정규직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턱없이 모자란다. 오히려 사회연대기금은 비정규직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못 되면서, 사용자 측의 책임은 덜어주는 효과를 낸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의 원·하청 상생기금은 올해까지 3년간 74억 7000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됐다. 2019년 1월에는 이 중 23억 6000만 원을 하청 노동자 4421명에게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의 하청 노동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도 아닌 데다 1인당 고작 5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SK이노베이션은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

했고, 석유화학산업이 침체했다는 지난해에도 영업이익은 1조 2693억 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분투재단도 금융회사 9곳이 출연 약정을 해, 지난해까지 30억 원가량의 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했다. 사무금융노조가 조직하는 제2금융권 회사 전체가 참여한 것도 아닌 데다,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도 고작 3억 원 정도를 낸 것이다. 우분투재단은 이 중 1억 5000만 원을 지난해 6월 사무금융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고작 100명에게 전달했다. 1인당 고작 150만 원을 지원한 것이다.

우분투재단 자신이 조사한 바를 봐도, 제2금융권 노동자 중 정규직은 고작 37.49퍼센트밖에 안 될 정도로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이처럼, 제2금융권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쥐어짜 지난해에도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극히 일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연대기금은 진정한 차별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을 쥐어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푼돈 수준의 재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생색을 내기에 유용한 수단이 되곤 한다.

정규직 책임론 강화

사회연대기금의 주창자들도 기금만으로는 하청·비정규직 처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자신들의 제안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사회연대기금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정규직 책임론을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에 오히려 해로운 효과를 낼 수 있다. 당장에 사회연대기금 조성 요구는 민주노총 등이 주장하는 정규직·비정규직 정액 임금 인상 투쟁과 충돌할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정액 임금 인상 요구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충분히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노동자 몫을 늘리고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도 좁히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정규직의 고임금 탓이 아니라 사용자들 탓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월 임금을 정액으로 20만~30만 원씩 제대로 올리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만만찮게 투쟁해야 한다.

반면 사회연대기금 제안에는 정규직 책임론이 함축돼 있다. 특히, 사회연대기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많이 양보해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가 발전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회연대기금 제안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비정규직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사회연대기금 제안자들은 정규직 책임론을 받아들이고 정규직 양보를 실행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사회연대기금을 논의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소비자가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합의한다. 그래서 임금이 2017년 1퍼센트, 2018년 1.9퍼센트, 2019년 1.5퍼센트 인상되는 데 그쳤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친 수준이 최소한

의 임금 인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일 수 있다.

사무금융노조 집행부도 2019년 산하 사업장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파견·도급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임금 억제

이처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회연대기금을 주장하며 정규직 책임론을 일부 수용하는 것은 투쟁을 회피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게다가 정규직 책임론은 결국 줄어든 몫을 두고 노동자들끼리 다투게 만든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과 반목만 낳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기성 언론들이 이런 연대기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양보 압박의 일환이다.

문재인은 2017년 금속노조 지도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을 받기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2019년 우분투재단이 출범했을 때는 민주당 대표 이해찬과 원내대표 이인영,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이 참석해 축하했다. 우분투재단을 적극 추진한 김현정 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얼마 전 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2017년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 지도부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때 받은 인센티브를 반납할 테니 정부도 돈을 내어 '공공상생연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에 문재인 정부는 기금 구성에 전혀 돈을 내지 않았다. 말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의 양보를 압박할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봤듯이, 이런 식의 노사정 타협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다.

경기 불황 속에서 기업 지원에 매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윤 회복에 목매는 사용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연대기금 제안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보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희생을 압박하는 그들의 공세에 길을 열어 줄 공간이 크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회연대기금이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을 압박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용자의 양보를 이끌어 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문제는 그 잠재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노동자 양보를 강요해 온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현대·기아차지부장의 연대임금 정책을 격려했다 이들이 연대임금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댄 2018년 4월 토론회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중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박설

금속노조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하후상박 연대임금” 요구를 올해는 채택하지 않을 듯하다. “10년, 20년 지속 추진”하겠다고 연대임금 요구가 얼마 못 가고 좌초된 것이다.

집행부는 대신 전체가 동일하게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정액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노조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노동운동 내에 연대임금·연대기금론이 대두하고 있는 지금, 금속노조에서 연대임금 정책이 중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대임금론은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양보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 올리자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적잖은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돕고 임금 격차를 축소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이 정책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경험은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로 정부·자본(원청사)의 책임을 강제하고 중소·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보여 줬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 자제의 효과

금속노조가 2018~2019년에 채택한 연대임금안의 골자는 이랬다: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를 낮추는 대신 현대·기아차 사측에게 나머지 부품·하청사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을 요구하자. 그러면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격차를 줄이고 원청사의 책임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하후상박을 위한 연대는 노동운동의 훌륭한 전통이다. 그러나 그 정신은 대공장 정규직의 임금 양보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위한 투쟁과 연대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금속노조 지도부가 제시한 방향은 투쟁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에 기동 구실을 한 하부영 전 현대차지부장은 “현대차 노조 30년 투쟁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노동자들의 투쟁 전통을 깎아내리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하 지부장의 주장과 달리, 역사적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리고 이런 동역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조건을 개선하면 중소·하청 노동자들의 조건을 잡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며 동반 상승한다. 가령, 자동차 산업에서는 매년 현대차의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이dra인 삼아 나머지 부품사·하청업체의 임금 수준도 결정된다.

투쟁의 상호작용을 봐도 그렇다. 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잘 싸워서 성과를 내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현대차지부처럼 잘 조직된 노조가 투쟁을 회피하고 양보하면 다른 노동자들도 상당한 임금 자제 압박을 받기 쉽다.

그 점에서 〈노동자 연대〉가 이미 2018년에 지적했듯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요구를 자제하자는 연대임

금론(양보론)은 나머지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

하청 노동자에게 도움 안 된 연대임금

그렇다면 실제 2년의 경험은 어떠한가? 금속노조 집행부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연대임금 요구를 중단하면서도, 그 배경과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다.

연대임금 정책 추진에 앞장섰던 하부영 전 현대차지부장의 임기 종료가 이 정책의 계속 추진에 어려움을 줬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설명은 못 된다. 금속노조 집행부가 연임한 상황에서 연대임금 요구를 중단한 것을 보면, 연대임금 정책이 목표로 제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추진력을 잃은 듯하다.

실제로 금속노조 몇몇 간부들은 “성공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꽤 있었다”고 말한다.

지난 2년의 경험은 연대임금 정책이 현대·기아차 등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반면, 노동자들 전반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을 보여 줬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적잖았다.

첫째, 현대차지부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얻었다던 현대차 사측의 부품·하청사 지원은 꾀죄죄했다. 특히 그 돈이 부품·하청사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나마 성과로 꼽혔던 2018년 현대차 노사의 특별합의는 사측이 하청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500억 원을 내고 저금리 대출 10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 지원금 500억 원조차 2~3차 하청업체 1290곳에 평균 4000만 원씩 지급했을 뿐이어서, 하청업체들도 대놓고 “생색내기식 쇼”라고 불평을 했다.

게다가 하청업체 사용자들이 이 돈을 받아서 자기 노동자들에게 지급했을 리도 거의 없다.

금속노조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현대차가 돈을 내기는 했는데, 솔직히 그게 누구에게 흘러 갔는지 모른다. 상생기금을 연대임금 요구의 성과로 내세운 것은 좀 민망하다.”

하향평준화 압박 커져 불만을 사다

둘째, 현대·기아차지부의 임금 양보로 부품·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약간 올랐다는 일각의 평가도 역지스럽다.

지난해 5월 민주노총은 임금 투쟁 모범 사례의 하나로 현대·기아차지부의 연대임금 요구를 꼽았다. 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시 현대·기아차지부장은 2018년 금속노조의 임금 협상 결과, 현대·기아차보다 나머지 115개사의 임금 인상액이 1만1000원 가량 높았으며 “작지만 격차를 해소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미미한 수준일지라도 대공장 노동자의 임금 양보 효과로 중소영세 사업장의 임금이 올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품사 노조들은 일명 “양재동 가이드라인”(현대차 임금 가이드라인)에 가로막혀 임금 투쟁이 더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몇몇 간부들은 “양재동 가이드라인에 걸려 싸우기 어렵다고 부

품사 지회들이 말이 많았다”, “(부품사 노동자를 위한다면 연대임금에 정작) 부품사 노조들의 기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사업장 전반의 임금 인상 수준이 떨어졌고, 현대기아차의 경우 임금 총액이 거의 동결 수준이었다는 점이 사태의 정확한 그림일 것이다. 연대임금 요구는 그것이 기대하는 효과와는 정반대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 압박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금속노조의 “하후상박 연대임금” 요구가 결국 “하박상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셋째, 지난 2년의 경험은 연대임금 추구가 노동자들의 연대 의식을 고취하기보다 오히려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보여 줬다.

현대·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연대임금 요구를 명분으로 임금 투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부영 전 현대차지부장은 자기 조합원들의 임금 투쟁을 자제시키면서 “귀족노조 프레임,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려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고 훈계했다.

그러나 노동운동 내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투쟁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커질수록 노동자들은 싸울 자신감을 잃고 위축될 수 있다. 연대 투쟁의 힘을 발휘해야 할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뿐인 것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가 아니라 연대 투쟁을 건설하려는 노력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사이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연대해서 싸울 때 모두의 조건을 개선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 인터뷰

“고용안정, 처우개선 하려면 직접고용 해야 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 본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2월 18일부터 지역 지회들도 순차적으로 하루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년 반 동안이나 투쟁하고 있다. 2월 18일 **홍종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투쟁본부장**(사진)을 대구 농성장에서 만나 그동안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로 선전전 662일, 천막 63일, 본사 지회 파업 12일차입니다.

2017년 9월에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당시에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지부 집행부의 도움으로 노조를 만들었죠. 2년 반 동안 사측은 “사장이 없다”고 하다가, 사장이 오면 “권한이 없다”고 하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 왔습니다.

지난해 채희봉 사장이 오자 우리는 기대했죠. 그런데, 신임 사장이 왔지만 사측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회사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2일과 13일 게릴라 파업을 하고, 1월 28일과 29일에는 전면 파업을 했습니다. 전면 파업에 나서자 사장이 “정부 지침 준수하겠다”며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처럼 말해서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집중협에서 사측은 “직접고용을 논하지 않겠다”며 자회사 방안만 논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너무 황당해서 사장 면담을 하러 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사장이 베트남에 가 있다고 해서 사장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를 파괴도 하지 않았고,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왜 남의 회사에서 이러냐”며 “불법 점거” 운운하면서 벌금과 징역을 매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조합원들의 본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 사무실 출입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회사는 용역 회사 유지 방안”

자회사로 전환된 공공기관들을 보면 용역회사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자회사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였던 가스기공에서 3년 일하다가 손자회사로, 용역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역회사는 자회사는 원하청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시기극임을 또다시 보여 주다 2월 17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스공사 대구본사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전에 5년 동안 한 용역회사에 있었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용역회사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용역회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원청이 해결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원청에 제기하면 ‘우리는 모른다, 용역 회사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자회사 가도 이런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투쟁해서 임금이 인상됐지만 [그 전에] 시설 [노동자]는 4년간 임금이 동결됐었고, 미화 [노동자]는 임금이 삭감됐다 5년간 동결됐습니다.

미화 노동자들이 정년 퇴직해도 인원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면적 대비 미화 인원을 한전 [수준]에 맞춘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주에 있는 한전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한전 [노동자]들은 온전히 건물 청소만 하고 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화 노동자들은 제조 작업과 연못 청소까지 해야 합니다. 한전에서는 조경 업무를 12명이 하는데 우리는 3명이 합니다. 면적 대

비 두배 이상 [인력]이 부족해 미화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건도 문제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층민 대하듯 차별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천민으로 보는 듯합니다. 이런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고용 요구를 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사측은 자회사로 가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바란다면 왜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 현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회사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측은 소방과 파견 업무 120여 명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10퍼센트)만 직접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파견 업무는 운전 기사나 비서 등인데 사측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어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직접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은 한국가스공사 소속이었다가 몇 년 전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생명안전분야라 직접고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조차도 투쟁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구색 맞추기 식입니다.

더군다나 직접고용 과정에서 경쟁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경쟁 채용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합니다. 고령친화 직종은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경쟁 채용이 아니라 전환 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

습니다.

사측은 원청과 자회사의 노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하청 4자 협의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협의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거나 구성되더라도 형식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측이 자회사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가 A부터 Z까지 책임이 큼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쇼에 불과합니다. 직접고용만이 답인데, 자회사 방안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해 통계이트 투쟁 때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충 자회사로 보내고 마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성과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너무 열통이 터집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될 것”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 투쟁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투쟁을 지지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반대하는데, 중도층이 많다고 봐요. 우리를 지지해 주는 노동자들이 성명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 투쟁을 비난한 무상급 노조인] 2노조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 노조’라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연봉도 공공기관 중에서 거의 탑 수준입니다. 비정규직에 연대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명분도 생깁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가스 민영화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규모를 키워야 투쟁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2년 넘게 투쟁하면서 많이 배웠고, 단련됐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와 단결하면 서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직접고용을 위해 별도 직군, 별도 임금, 별도 예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칫 민간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해를 끼칠까 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조건에서는 일단 직접고용이 급선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어려운 시기에요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 놓는 것을 막으려면 직접고용이 답입니다.

비정규직 투쟁에 숭통이 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투쟁이라는 책임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의지는 더 굳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동지들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정리 강철구